

빈집이 묻는다 “다시 살아도 될까요”

특별기고

윤명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장



군데군데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 나빠진 주거환경을 못 견디고 떠나는 주민. 그리고 또다시 늘어나는 빈집. 요즘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는 광경이다.

‘빈집은 자원’ 인식 전환 필요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부진, 복잡한 법적 절차에 따른 재건축 지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많은 수의 빈집이 양산되고 있고, 그 규모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 수는 2024년 기준 13만 4018호에 달한다. 특히 전체 빈집의 42.7%인 5만 7223호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시도 중 가장 많은 2만5호의 빈집이 위치해 있다. 빈집은 단순히 방치된 공간이 아니다. 범죄,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는 물론, 도시 미관 훼손과 공동체 기능 약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사소한 것들을 방치하면 더 큰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빈집 문제는 소극적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다. 비슷한 문제를 먼저 겪은 해외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지역 재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왔다. 미국 디트로이트는 빈집을 예술가와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쇠퇴한 도시를 문화지구로 탈바꿈시켰고, 일본은 ‘아키야 뱅크(Akiya Bank)’라는 공공 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모델링 보조금과 같은 실질적 지원 제공으로 이주와 지역 재생을 유도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빈집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의 적절한 개입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해 시군구에서 맡아왔던 빈집 관리 책무의 국가와 시도로의 확대, 관련 세부담 완화,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관리현황 및 거래매물 정보 제공 등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빈집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시도·시군구가 함께 연계한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의 구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빈집이 가장 많이 위치한 우리 지역은 전남도가 주도하는 차별화된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 ‘빈집은 자원’이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 자연·역사·문화 등 우리 지역만의 비교우위 자원, 여유있는 삶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의 변화 등을 정책 설계 시 반영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든

해외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활용 가능한 빈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금번 발표한 종합계획에 빈집 매물 공개, 빈집 예측·분석 시스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고도화 과제를 반영한 바 있으나, 여기에 더해 리모델링 가능 여부, 주변 인프라 정보 등 보다 세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남형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다면 활용도는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빈집을 카페, 공방, 게스트하우스,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성과를 거둔 여러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관광 콘텐츠·특산물 등을 결합시켜, 원주민과 귀촌인이 함께 창업과 거주를 동시에 영위하는 새로운 빈집 활용 모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전남형 빈집은행’ 등 서둘러야

아울러 빈집 문제는 하나의 부서 또는 기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실태조사·정보수·자문·창업연계·민간협업 등 종합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빈집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빈집 문제는 단순한 공간 관리 차원의 영역을 넘어 ‘전남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지금 이아말로 전남이 ‘소멸의 시간표’를 ‘재생의 시간표’로 바꿀 골든타임이다. 지금, 전남의 빈집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이곳에 다시 사람이 살아도 될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이다.

도심속 생태의 숨결, 무등산서 지구를 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광주에 상징이자 시민의 정신이다. 2013년 무등산은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도시 근교형인 무등산국립공원은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 쉬는 ‘생태의 보고’로, 맑은 계곡과 숲은 시민들에게 심과 치유를 선물한다. 무등산국립공원의 존재는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일깨우는 살아 있는 교과서다. 축제가 무등산국립공원을 배경으로 열리는 것만으로도 도시 속 생태공간을 재발견하고 일상의 틈에서 자연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에서는 ‘무등산국립공원 생물다양성 대탐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중심사 지구 일대에서 다양한 생물종을 시민이 직접 조사·기록하는 참여형 활동으로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느끼고 실천하는 장이 될 것이다. 무등산국립공원의 현안문제와 생태계를 이해하고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무등산국립공원 정장부 일대에는 방공포대가 있는 군부대 주둔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빛공해는 꽃들이 개화에 필요한 피토크롬 생성을 방해하고 있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밤 시간, 즉 휴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해쳐 생물다양성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의 정장부는 절대 보존 지역이다. 인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최소화하는 엄격한 사고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장 개방 행사는 하루 2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군부대를 이전하고 정장부 복원도 하기 전에 상시 개방하는 현재의 탐방 방식은 국내·외 어떤 국립공원에 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이다. 다행히 이번 축제가 저지대인 제1수원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시민들과 함께 생물종을 조사하고 그 생태적 가치를 되새기는 방향으로 새로운 탐방문화를 열어가고자 한다. 결국, 지구를 위한 생태환경축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다. ‘나는 어떤 지구에 살고 싶은가?’, ‘앞으로의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등산국립공원의 숲길을 걸으며 우리는 그 답을 조용히 찾아갈 것이다. 자연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한가운데, 무등산국립공원은 묵묵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축제가 더 많은 이들이 무등산국립공원을 다시 만나고, 지구와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 배움이 다시 일상으로 변저 더 따뜻한 광주공동체와 지속가능한 지구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사고빈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대책 수립을

에 운전면허 반납이 생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단순한 면허 반납 유도가 아닌 고령자를 위한

대체 교통수단 마련, 안전운전 교육 확대, 정기검진 의무화 등 다양한 대책을 대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이준성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1989년 6월 29일 창간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편집국장 박간재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자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공약은 국민에게 하는 엄중한 약속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주요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7명의 후보는 일제히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을 반영하듯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물론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안,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과 미래세대, 노동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로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AI 청년 인재를 20만 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민간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도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후보가 내놓은 정책, 그중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AI 3대 강국 도약을 10대 공약에 포함한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2위로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많아 AI 도시 광주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그동안 각종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유권자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에도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오죽하면 빌 공자 공약이라는 비아냥이 나왔겠는가. 이번 대선에서 만큼은 후보들의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지는 굳센 약속이길 바란다.

여전히 심각한 교권침해 대책 시급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교권 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24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광주는 151건, 전남은 91건이었다. 학급별로는 광주의 경우 중학교가 90건, 고등학교 31건, 초등학교 26건, 특수학교 3건 등이었다. 전남은 중학교 53건, 고등학교 22건, 초등학교 15건, 유치원 1건 등이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광주는 명예훼손 54건, 교육 활동 방해 46건, 상해와 폭행이 16건이었다. 전남은 교육 활동 방해 32건, 모욕 명예훼손 15건, 상해 폭행 10건 등이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광주가 출석 정지 53건, 사회봉사 31건, 학교에서 봉사 29건, 전학 10건, 학급교체 5건, 퇴학 0건이었다. 중징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많았다. 전남은 출석 정지 28건, 전학 16건, 사회봉사 13건 등이었다. 전국적으로도 무려 4,199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매일 10건 이상

의 교권 침해가 일어난 셈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변화는 고사하고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권 침해는 여전하며 교사들이 교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쌓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광주 교사노조 관계자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교육계에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는 당연하고 현장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 중심의 교육구조와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봇물을 이룬다.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학습량을 줄여 학생들이 감수성과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권익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교권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교권이 존중받아야 교육이 건강해지고 나라의 미래도 밝다.

사진 속 세상



울산시청 정원 텃논서 모내기

울산시청 생활정원 텃논에서 열린 모내기 행사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모를 심고 있다. 울산시 제공